

중대재해처벌법, 현재 심판대에

한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증기중앙회 “과도한 처벌 위헌”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처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법소원 심판에 대해 한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청구된 한법소원심판에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말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현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한 후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증기중앙회는 이번 회부 결정과 관련해 심판 청구가 적법하고, 중처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또 이번 한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증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尹 복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하고 수석 부원장
이 참석했다는 전
언이다.

이 원장은 서울
에서 태어나 서울
대 경제학과 출신
으로 공인회계사

국정쇄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주요 인사 등의 교체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법률수석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51·사진)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실상 대통령실의 옛 민정수석 역할을 할 조직으로 신설할 신임 법률수석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내정 단계라는 것이다. 다만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구도와 연동할 수 있어 최종 확정 단계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 특수통으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윤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실이 총선 이전까지 정부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해온 ‘약체 비서실’의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함께 온 이 원장의 ‘용산 합류’를 검토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사전에 예정돼 있는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 불참하고 관련 금융계 사장 사전 미팅 약속도 부원장이 원장 대신 참석했다는 것이다. 또 원장 보고 일정과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불참

하고 관리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비서실 인선과 관련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참모가 운데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에 대한 교체를 우선 확정하고 사

회수석 등의 교체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적 쇄신의 상장성이 큰 비서실장의 경우 윤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구성을 비롯해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남부거대경제권’ 대역사 막 올랐다



국민의힘 윤재옥(사진 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열린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재준(대구 북구갑), 정연숙(부산 수영구),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암군봉화군),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조지연(경북 경산시),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김상욱(울산 남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박성훈(부산 북구을),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당선인, 배준영 사무총장, 이인선 비서실장, 정희용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구·광주, 남원서 쭉오프 회의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의체 발족
6대 추진과제 목표·로드맵 설정
2038하계AG 유치 등 의기투합

달빛산업동맹으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속도를 낸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산업동맹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7일 두 지역의 중간지점인 전북 남원시에서 쭉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달빛산업동맹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올해 2월 7일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달빛산업동맹 상생 협력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마련된 테스크포스 조직이다.

추진단 구성은 대구와 광주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달빛고속화철도 건설△공항 후적지 개발반 △달빛첨단산업단지 조성반 등 과제별 6개 실무반을 편성하고 양 지방자치단체 실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쭉오프 회의에서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6대 협력 과제별 추진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타당성에 대한 대응 논의 개발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전검토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연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설 공정에 대해 논의했다.

달빛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 선정과 경남, 전북 등 소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토의했다.

국가 AI·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기 회의와 현안에 따른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무반별 업무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면서 과제에 대한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内부서 ‘윤재옥 비대위’ 공감대

채상병 특별법 등 야당 공세 부담 변수…전당대회 6~8월 중론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준비 기구인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에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겸임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다면, 윤 권한대행이 야당의 거센 특검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어서 최종 확정 적이지 않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당 원로인 상임고문단 회의와 22대 초선 당선자와 오찬을 통해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구성을 비롯해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장을 맡지 않기로 하면 5월 초 선출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뒤 비대위를 구성해야 해 ‘실무형 비대위’ 출범이 길게는 한 달 가량 미뤄지게 될 전망이다.

실무형 비대위 출범 시기와 연동되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두고는 당내에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첫 정기 국회가 열리기 이전인 6~8월 사이에 정식 지도부를 선출해 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편이다.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

www.sj.go.kr/sjlife



2024
성주참외 &

5.16 목 길놀이

군민 길놀이 | 태봉안 행차 재현

5.17 금 개막식

김종국 | 레게 강 같은 평화 | 육중완밴드 | 김수찬

5.18 토 태교음악회 | 참외가요제

김필 | 온도 | 제니스 | 이예준

5.19 일 드림페스티벌 | 별뫼줄다리기

노브레인 | 21학번 | 캔블러 크루



생명문화 축제

2024. 5. 16 목 ~ 19 일

성주 성밖숲